



[혐오민국 길을 묻다] 난민 혐오 우려 수준 사회 시스템으로 해결을 03



Economy

코스피	2265.46 (-7.30)	코스닥	799.10 (+3.39)
금리 (국고채 3년)	2.13 (-0.01)	환율 (원-달러)	1114.50 (-4.20) (4일)

김앤장 “삼바 콜옵션 주식 누락, 회계위반 아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어제 4번째 심의 회사측 주장에 힘 실릴 듯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법무법인 김앤장으로 부터 2012년, 2013년 감사보고서 주식 등에 바이오젠 콜옵션 계약을 적시하지 않은 것은 회계처리 위반이 아니라는 자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네 번째 심의

를 마무리했다. 이번 회의는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동시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대심제로 진행됐다. 금감원은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

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 회사로 갑자기 변경한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 등을 반영한 회계법인의 자문에 따라 회계처리를 변경했음은 고의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2013년 감사보고서 주식에 바이오젠과 콜옵션 계약을 적시하지 않은 것을 회계처리 위반의 근거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의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의견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자문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앤장이 “콜옵션 가능성을 주식에 명시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2012년, 2013년 주식 누락이 회계처리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아울러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는 삼성물산, 삼성전자 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식 누락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 누락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해당 자문을 받은 것은 맞다”며 “이번 증선위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2015년 이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문제가 담긴 수정 조치안을 증선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조치안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증선위에서 수정 조치안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오는 18일까지 증선위 논의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기업 옥죄기에 투자·소비 실종... 3% 장담 못해

(울 성장률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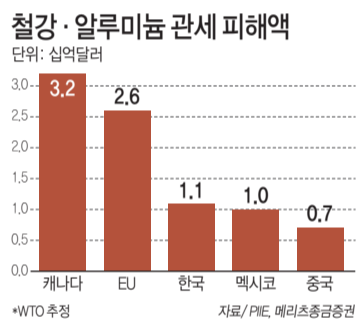
불편한 경제, 불편한 진실

(1) 韓경제 3% 성장?

600기업, BSI 7월 전망치 17개월 만에 최저치 경신

수출·내수 모두 뒷걸음질 글로벌시장, 韓전망 낮춰

부동산 '강남 불패', 주택 보유세 인상 정책이 예고됐지만 '뽕뽕한 한채' 못 맞서는 수요 때문에 일부 집값은 오히려 상승세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마다 어김없이 고개를 드는 것이 '공급 부족'. 문재인 정부도 공급 확대정책을 쓰고 있다. 수급의 균형을 맞춰 집값



을 잡겠다는 것. 보유세 인상카드도 나왔다. 하지만 정책과 현실이 따로가면서 이 같은 정책이 물음표가 붙는 게 현실이다.

기업들의 생각도 정부와 따로 놀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3% 성장을 장담한다. 시장 전망이 좋으면 투자를 하게 마련이다. 현실은 아직 한겨울이다. 지난 5월 설비투자는 3.2%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증가하다가 3월 7.

6%나 급감한 데 이어 4월에도 2.7% 줄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다. 국내 3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 총액이 883조원에 육박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약 75조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3% 성장을 장담하는 한국경제의 불편한 진실이다.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고 있고, 국민들은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쓸 돈이 없다는 게 이들의 아우성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공공투자 확대를 주문한다. 또 산업 체질 개선을 통해 4차산업 시대에 기업이 살아남을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경제 경고등...언제쯤 파란 불 될까

경기전망에 대한 경고등이 커

졌다.

한국경제연구원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7월 전망치가 90.7로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기업들은 미·중 무역전쟁 심화에 따른 통상 환경 악화와 내수 부진, 주 52시간 근무로 인한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부정적 경기 전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을 낮추고 있다.

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의 12개월 예상 명목 성장률 컨센서스는 4.70%이다. 연초 대비 0.20%포인트 하락했다. 신흥국에서는 러시아(-0.50%포인트), 브라질(-0.20%포인트)과 함께 뒷걸음 한 것이다. 미국은 5.10%로 연초 대비 0.30%포인트 상승했다.

유로존도 연초 대비 0.20%포인트 상승한 3.70%였다. 일본의 명목 성장률도 2.20%를 기록 중이다.

수출과 내수 모두 암초에 걸려 오도가도 못하는 모양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수출액 500억달러에 대한 25% 관세 부과는 한국 수출에 큰 영향이 없지만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전체 수출은 6.4% 감소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말의 전쟁'에서 '행동의 전쟁' 단계로 비화됐다. 특히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러시아까지 미국에 맞대응하고 있다.

내수부진도 걱정이다. 쓸 돈이 없어서다.

2018년 경제성장의 견인차 구실을 해야 하는 민간소비의 성장 기여도는 0.3%포인트에 불과했

다. 2017년 4분기 0.5%포인트보다도 하락한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친화 정책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드는게 현실이다. 심리적인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투자와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

유진투자증권 이상재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최저임금 인상·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통상임금 인장·근로시간 단축·법인세 인상)을 통해 민간소비를 부양함으로써 인구 고령화에 의한 장기 저성장 추세를 벗어나고자 했지만 정책의 성과가 확인되기도 전에 고용 부진이라는 암초에 부딪힌 양상이다”고 지적했다.

(2면에 계속)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대출금리 오류... 성난 여론에 화들짝 여·야도 '금리조작' 처벌법 발의

당초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던 대출금리 오류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졌다. 성난 여론에 금융당국이 제재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나선 데 이어 정치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산정에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현재 일부 은행에서 발생한 가산금리 조작과 관련한 내용은 많은 대출자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며 “현행법에는 가산금리 조작이나 잘못된 금리 부과에 대한 금지 조항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은행법 제52조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조항에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등에게 부당하게 금리를 부과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신설해 은행에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야당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3일 김관영 바른미래당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 역시 불공정행위 유형에 ‘부당한 금리 산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1@

임대전환·부부 공동명의·증여 등 종부세 인상, 부동산 개편 가속화

갭투자 줄여 안정세 기대 다주택자는 절세방법 고심

“증여해야 하나 임대사업자로 전환해야 하나.”

보유세 개편안 권고 이후 부동산 시장 투자 지도가 바뀔 전망이다. 특히 절세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서울 강남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은 세금을 아끼기 위해 증여, 임대사업자 전환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다. 향후 개편안 권고대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및 공

시가격이 현실화될 경우 세금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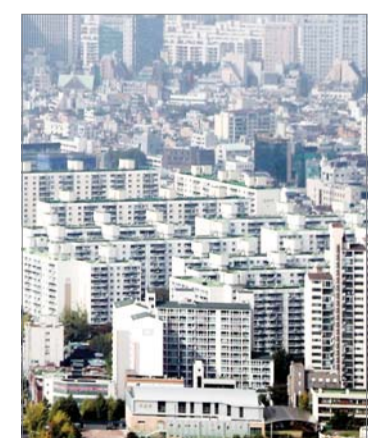
다주택자의 경우 집 처분으로 세 부담을 피하기도 만만치 않다. 특히 지난 4월 이후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때 조정대상지역에서 최고 62%까지 양도세 증가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증여, 부부 공동 명의 및 임대사업자 전환 등 다양한 절세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이번 ‘재정개혁 권고안’에 따라 앞으로 가수요나 갭투자가 줄어들고 주택가격도 하락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 분석이 우세하다. 권일 부동산산업포럼장은 4일 “중

합부동산세 인상으로 서울 강남 등의 다주택자는 매각보다 증여, 임대사업자 전환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다주택자가 가장 많이 고려하는 절세 방법은 임대사업자 전환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주택가격이 치솟자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전환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장기간 처분할 의사가 없을 경우 절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8년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주택취



서울 강남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득부터 매각 때까지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다른 절세 방안으로 세무사들은 부부 공동명의 전환, 증여 등을 권고한다.

증여도 한 방법이다. 강남 등 부동산을 매도보다는 자녀에게 증여해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